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5호 소개

2013년 6월에 창간하여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달로 제25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사건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내가 국가의 불충분한 보호에 대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는데 이는 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당시에 혹은 이것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당시에 당국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고 있었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체계를 수립 및 적용하고, 그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난민신청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는 때에 고려되어야 하는 최소생활요건' 사건은 난민신청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도 난민신청자가 송환된 국가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되는 최소생활요건에 대한 사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담당 관청과 법원이 난민신청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기 전에 그곳의 상태에 대해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3호에 소개되었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 사건, 뉴스레터 제22호에 소개되었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난민신청심사에서 자녀의 출생과 가정생활의 보호' 사건, 뉴스레터 제19호에 소개되었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단기로 규정된 망명신청사건 이의제기 기한의 위헌성' 사건, 뉴스레터 제18호에 실렸던 유럽인권재판소의 '망명신청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피신청국의 절차적, 실체적 의무' 사건, 뉴스레터 제10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동성애자 망명신청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 뉴스레터 제4호에 실렸던 스위스의 '난민의 혼인할 권리에 관한 결정', 뉴스레터 제3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난민의 귀화신청' 사건, 뉴스레터 제2호에 실렸던 독일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보호급부규정의 위헌성' 사건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뉴스레터 지난호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ri.ccourt.go.kr/cckri/cri/main.do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대학의 자율성과 등록금 부과 금지' 사건은 대학이 시험 준비를 위한 복습강의를 추가적으로 개설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헌법이 대학의 재정조달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의 근거 없이 학생들로부터 정규학과 과정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규학과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복습강의에 대한 등록금 징수 역시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외국에서 출생한 미혼모·부 자녀의 국적 취득에 있어서 부모에게 다르게 규정된 거주조항의 위헌성' 사건은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인 국적을 물려줄 때 요구되는 실제 미국거주요건에서 남녀의 기간이 달리 규정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것은 명백한 성에 기반한 차별로서 평등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하원에 교섭단체가 없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선거방송시간의 차별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은 선거방송시간을 배정하면서 교섭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방송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견해의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나 정치단체도 공영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판대상규정은 이것과 명백히 조화되지 않는 공영방송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을 위해 강제금을 부과하는 헌법재판소조직법 개정의 위헌성'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재판소조직법의 개정이 문제된 사건이며,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외국인들 간의 차별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은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권이 인정된 후 3년, 벨기에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체류권이 인정된 후 5년이 지나야 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무제한적 체류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국가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법이 지방자치의 원칙과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은 전략적 광물 보유지역의 신설 및 확대, 전략적인 국가이익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이 지방자치의 원칙과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아시아의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와 터키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2010년 창립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회원국으로 현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몽골 등 16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연구상설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7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연결하시면 해당 기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통신원 소식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자로 연료세(Brennelementesteuer) 위헌결정'과 중국통신원 소식으로 '중국의 사법개혁 실시동향: 상하이시의 현황을 중심으로'를 실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더욱 풍부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